

# 한미 FTA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한미 FTA 협상이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07년 4월 2일 공식협상타결 선언에 이어, 노동·환경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2007년 6월 30일 서명되었다. 이로써 양국은 해당 의회의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한미 FTA는 이전의 한·칠레 FTA와는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무역국을 상대로 양자간 협상방식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과 협정 범위가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한미 FTA는 세계 최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향후 한·EU, 한·중, 한·일 등의 FTA 추진이 예견되므로, “제2의 개국”이라고 불린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에서는 분야별 영향과 파급효과, 그리고 그 대책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를 굴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비준저지에 나서는 일부 반대론자와 이에 맞서 한미 FTA의 필요성과 협상결과의 타당성을 홍보하려는 官 중심의 찬성론자가 각자의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모든 사회적 합의가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미 FTA도 해당 한국과 미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각 국내 국민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더 더욱 불가능하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간, 계층간, 부문간 양극화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라는 갈

등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3장 이하에서는 한미 FTA 협의결과가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요인은 고용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산업·기업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3장, 4장, 5장에서 제기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 2. 한·미 FTA의 합의사항 및 영향

한미 FTA는 자유무역정도와 범위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이다. 기존의 한·싱가폴 FTA, 한·EFTA FTA와 비교할 때 한미 FT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미 FTA는 공산품과 임·수산물 상품에 대해 3년내 94% 관세철폐를 반영한 높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섬유를 포함하여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산품의 양허율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94%는 한·칠레 FTA의 99.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싱가폴 FTA(68.8%), 한·EFTA FTA(91.1%)보다는 높

은 수준이다. 둘째,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에게 민감한 쌀을 포함하여 수확기의 오렌지, 식용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거나 현관세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쌀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감귤에 대한 제주도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부분으로, 향후 한·중 FTA 가운데 농산물 분야에서의 협정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역내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한기업의 북한지역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단순 무역의 차원을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넷째, 선택적인 서비스분야의 단계적 개방이다. 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에서는 단계적 개방이 결정되었지만, 교육 및 의료분야에서는 선택적으로 제외되어 개방의 정도측면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하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강화되었고, 정부조달의 개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는 등 세계화시대 지구차원에 더 부합되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산업연구원 2007)

주요 분야별로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07)

자동차분야에서는 3,000cc 이하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을 즉시,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등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또한 미국 측의 관심사항인 세계개편 및 표준 현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5%를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를 5단계에서 3단계를 축소하고 그 세율도 조정되었다.

공산품, 임·수산물 등 상품양허분야에서는 한미 모두 품목기준으로는 100%, 수입액기준으로 3년 내 94%내외의 관세철폐가 합의되었다. LCD 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칼라TV등 공산품의 관세는 조기에 철폐되고, 수산물목 가운데 명태(15년), 고등어·민어·넙치는(12년) 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가 합의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이 양허제외에 포함되었고, 오렌지 등 31개 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 쇠고기·돼지고기 등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면서 기간 동안의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보되는 등,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급격한 퇴락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농산물, 과수, 한우 및 돼지고기 품목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섬유분야에서는 아세테이트장섬유직물, 부직포, 바지, 양말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액기준 61%의 미국 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우

리나라 관심품목이 원사기준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급부족 섬유소재를 사용하는 의류·직물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 영향, 환경 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의 기준을 반영하여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Outward Processing Zone)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여,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였다.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협정이 발효되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무역구제분야에서는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협의를,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중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나라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합의되어, 강대국 미국에 의한 일방적 무역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방송분야에서 부분적으로 PP(프로그램 공급자, Program provider)가 개방되고,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49%)을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

를 허용키로 합의되었으며, 법률·회계·세무 등 사업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관심사이었던 교육 및 의료 시장은 개방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상표) 분야에서는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합의되었다.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허기간이 연장되었고, 상표권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합의되었다.

### 3. 고용의 양극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고용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수의 전문기술종사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 상위 30%와 하위 30%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위권 임금 수준인 40%~70%의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특히, 임금 근로자만을 국한하여 살펴보면, 중위 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며, 하위 임금 수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첨예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에 있다. 비정규직의 전체규모는 2001년 8월 363만5천명에서 2007년 3월 580만6천명으로 217만1천명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및 기타 비전형 근로를 포괄하는 고용 형태상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27.3%에서 2007년 3월 현재 36.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7) 특히, 최근의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서 기인한다.(신동면 2006, 40~41) 2007년 7월1일부터 2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실시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은 향후 더욱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은 일자리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7년 1~3월 월평균 임금은 172.4만원인데,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98.5만원인데 비하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이의 64.1%에 불과한 127.3만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고, 그동안 우리 경제에 FTA의 영향이 있었다면 2004년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FTA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화의 결과이며, FTA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공식부문을 확대하였고 멕시코 외환위기는 NA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994년 12월에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외환위기-구조조정-비정규직 증가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FTA와 비공식부문(비정규직)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함을 알 수 있다.(허재준 2006, 9)<sup>1)</sup>

비정규직문제의 근원은 시장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확립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FTA와 관련한 일자리창출의 문제도 간접적이지만 비정규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FTA를 통해서 특정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해당산업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은 세계화와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감소현상은 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1>에서와 같이 농·림·어업의 경우 2000년 224만3천명에서 2006년에는 178만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광공업 포함 제조업 종사자는 431만 명에서 418만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의 경우,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2006년에만 약 7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제조업의 경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과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용성고가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방식이 여전히 노동이나 고숙련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본투입 확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력의 원천을 고부가가치 인력을 활용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형 투자에 의지하고 있다.

1)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이루어지는 것 만큼이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인과관계를 결여한 채 필요 이상의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NAFTA 체결 이후의 멕시코 수출 증대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보다 멕시코의 외환위기로 초래된 페소화 폭락이다. 멕시코는 1994년 12월 20일 페소화 가치폭락과 함께 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았다. 폭락한 페소와 가치에 힘입어 멕시코의 수출상품은 경쟁력을 얻었고 이후 몇 년간의 멕시코의 수출 등 화려한 경제실적의 배경이 되었다. 이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최근까지 FTA체결의 영향없이도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온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허재준 2006, 9)

〈표 1〉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산업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농림,어업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A.농업 및 임업	2,162	2,065	1,999	1,877	1,749	1,747	1,721
B.어업	81	83	70	73	76	68	64
광공업	4,310	4,285	4,259	4,222	4,306	4,251	4,185
C.광업	17	18	18	17	16	17	18
D.제조업	4,293	4,267	4,241	4,205	4,290	4,243	4,16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14,603	15,139	15,841	15,967	16,427	16,789	17,181

자료 : 통계청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는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외환 위기 이전인 1993~96년에는 경공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2년에는 경·중공업을 막론하고 대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투입 중심의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일자리 창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졌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압력에 따른 축소지향적인 경영 및 상시적인 고용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갈수록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전병유·김복순, 2005)

한미 FTA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주로 官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1개 국책연구원이 각기 해당부문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만7천명, 장기적으로는 8만3천명~33만6천명<sup>2)</su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sup>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6천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는 반면,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5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9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의 피해가 가장 크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다는 가

2) 이는 모두 누적 개념으로, 이하의 고용효과도 마찬가지이다.

3) 한미FTA의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07) 자료를 정리하였다.



정과 개방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서 1.2%, 서비스업에서 1%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농림어업에서는 약 1만~1만3천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는 2만7천~7만9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9천~26만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측면에서도 다소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여 그간 누적된 일자리 소멸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장기에 들어서야 한미 FTA의 시장규모 확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일자리 창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농업종사자의 58%가 55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90%인 특성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일자리 소멸규모는 약 1만6천개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의 경우에 해당되며,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감소하는 농어민 규모 추세와는 별개로 한미 FTA에 의한 생산물 감소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누적 실직자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감소라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만, 고용측면에서 현재

농업 종사자들의 연령구조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 근로자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수요의 규모가 소득감소와 비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세철폐가 단계별로 실행될 지라도 이농현상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소득감소의 문제는 심각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기존 종사자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은 한미 FTA의 주 내용인 관세철폐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분야로서 단기적으로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증대가 발생한다면 2만7천~7만9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추정된다. 약 5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방 이후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의 개선에 따라 생산성증대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일자리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협상결과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고용의 증가는 주로 자동차, 섬유, 전기전기의 3개 업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면 현재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가 연간 5만~6만에 달하고 있어, 한미 FTA에 의한 고용증가효과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 현재의 감소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한미 FTA는 두 가지 경로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량적으로 발표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단기 6만9천개, 장기 6만9천~26만7천개로 추정되었지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07),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으로 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서비스산업종사자 10,556,329명 중 통신업은 1.2%, 금융·보험업은 5.5%, 사업서비스업은 9.4%의 고용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사업체와 고용이 집중되어 있다.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 서비스 사업체의 97.82%, 전체 서비스산업 고용의 62.0%를 차지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임시직,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중 상용종사자는 전체의 54.37%에 불과한 데 반해, 자영업자·무급가족·무급종사자가 35,915에 이르러 고용형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보다 규모면에서 41.2배 큰 미국과의 한미 FTA는 취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에 차별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이다. 구조조정 대응능력을 갖춘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세무·컨설팅 등의 부문에서는 소규모이지만 고용창출이 기대되

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한 부문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정성적 평가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하고 측정된 파라미터 값이 있는 모형에 변수들의 예측치를 산입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정과 여건이 변한다거나 우리의 대응방향의 여화에 따라서 기대치가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06)에서도 정태적 효과만 고려할 때에는 8만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동태적 자본축적효과까지 고려하면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생산성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55만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등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성적 차원에서의 설명요인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한미 FTA가 실제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성적인 차원에서는 시장의 확대, 비교우위의 효과, 직접투자 확대, 경쟁심화로 인한 노동수요 증대, 시장점유율의 변화 등 다섯 가지의 요인이 고용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할 것이다.

첫째 요인은 시장이 확대되어 성장률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순수한 무역창출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지닌 시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데 기인하는 이러한 효과는 양국에서 공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요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비교우위 효과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부문에서는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에서는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효과이다. 특화 양태의 강화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산업 및 업종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엇갈릴 것이다. 한미 FTA의 결과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분야에서는 노동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농·림·축산업 분야에서는 노동수요의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요인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파생시키는 노동수요 증대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미국 국적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과 유럽의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존재하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투자율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증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설비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물론 국내에 유입되는 자본 중에서도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직접투자가 클수

록 이러한 효과는 클 것이며, M&A 투자라 할지라도 그에 설비투자가 수반되면 역시 직접투자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요인은 국내 기업이 국내 시장 중 그동안 보호받아 왔던 부문에서 미국 등 외국기업과 경쟁하면서 축적하는 생산·경영상의 노하우와 정보 축적, 그리고 이를 해외 시장 확대에 활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에 따른 동태적 노동수요 증대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 그동안 교역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던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효과이기도 하다.

다섯째 효과는 기업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어 한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과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거꾸로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과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효과이다. 예컨대, 한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미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감으로써 미국에 위치한 동종 기업이 도태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미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감으로써 한국에 위치한 기업이 도태된다면 한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한미 FTA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전기·전자를 제외한 한국의 산업기술수준이 미국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도산되면 국내의 고용은 감소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이면 증가할

것이다. 농업의 경우도 이 부문에 해당한다. 농업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175만 명의 농업인구 중 55.8%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농어촌특별세로 재원을 조달하여 5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도 농업부문에서 가시적 구조조정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 농업부문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한미 FTA와 같은 대외개방 효과가 없더라도 농업부문의 고용은 15년이 지나기 전에 현재의 1/2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러한 다섯 가지 효과가 종합된 결과 나타나는 전반적 고용효과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농가인구 뿐만 아니라 절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한미 FTA에 따라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지만, 쌀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타 품목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이고, 현재 농업종사자가 무급가족종사자등 비임금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큰 폭의 고용감소는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농가인구의 노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감소율은 고용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국 기업

의 경쟁력은 높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하는 한국 기업이 더 많으리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유일하게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가져 올 효과는 비교우위 확대 효과일 것이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7.2%대이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인 상태에서<sup>4)</sup>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낮아지는 관세율의 상대적 크기로 짐작해 보는 보수적 추론에<sup>5)</sup> 따라 순수한 비교우위 확대 효과는 다소간 미국에 유리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네 가지 효과는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넷째 요인인 비교우위 효과를 모두 압도하여 순수한 일자리 창출 효과의 증감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사전적(事前的)으로 어느 효과가 더 지배적일지를 평가하면 시장 확대, 직접투자 확대, 경쟁심화로 인한 노동수요 증대, 시장점유율의 변화 등으로 파생되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마이너스(-)이기보다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열등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제품은 특화 영역이

4) 2004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각 품목 단순평균 관세율은 각각 11.9%이며, 가중평균 관세율은 각각 7.2%와 1.5%이다.

5) 관세율의 상대적 차이가 초래하는 수출증대 효과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나타나리라는 추론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양국에서 동일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 중국, ASEAN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개방도가 높은 특성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때의 가격탄력성은 한국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때의 가격탄력성보다 훨씬 탄력적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복되기보다는 보완적이며, 법률, 컨설팅, 여행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뒤지지만 한미 FTA 체결 후의 추가적인 서비스 수입 증가가 국경간 거래보다는 주로 현지 주재의 형태를 띠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서비스업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소득분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

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표4>에서와 같이 대표적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1997년 0.227에서 2003년에는 0.311을 기록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2>에서와 같이 1997년 이후 P50/10분위수 배율보다 P90/10분위수 배율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임금소득 상승폭이 중간소득 집단보다 더 많은을 나타낸다.(신동면 2006, 37)

소득불평등의 심화 이외에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

〈표 2〉 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 추이

연도	지니계수	분위수배율	
		P50/10	P90/10
1980	0.367	2.00	5.12
1985	0.342	2.01	4.60
1990	0.301	1.91	3.96
1995	0.273	1.96	3.67
1996	0.281	1.96	3.78
1997	0.277	1.99	3.74
1998	0.202	2.01	3.83
1999	0.286	2.03	3.86
2000	0.299	2.08	4.08
2001	0.300	2.05	4.10
2002	0.303	2.09	4.24
2003	0.311	2.09	4.35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2005. 신동명(2006)에서 재인용.

주 : PX분위수는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X%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며, 분위수 배율은 대표적인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임. 수지차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율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임금 근로자의 2.5%, 자영업자의 1.6%가 절대빈곤 가구에 속하였던 것이 2004년에는 각각 4.9%와 6.25로 늘어났다. 절대빈곤율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약 2배, 자영업자의 경우 약 4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신동면 2006, 38)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전개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격차 등 양극화현상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식정보기술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급속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과 취업자가 1990년부터 감소추세에 영향을 미쳤으며, 제조업부문에서의 중저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는 정보통신 중심의 산업개편으로 고기능 근로자들(high-skilled workers)의 소득과 노동집약적 산업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소득분배와 일자리의 질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지식기반시대의 전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국제경제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영향력 등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사정이나 분배구조는 한미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BRICs의 부상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될 지식정보형 혁신산업의 전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미 FTA도 소득분배와 일자리의 질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다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자 임금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분배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둘째, 저임금근로자보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분배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되는 순수출 증대로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5천 억원의 생산증대의 효과가 기대되고, 관세철폐와 이에 따른 수입증대로 국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15년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대외경제연구원 외 2007)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증가를 대비 근로자의 임금 상승율은 업종과 기업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대기업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이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전체의 소득분포도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로 인하여 사회의 소득분배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한미 FTA를 거부할 것인가?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소득분배상황은 개선될 것인가? 현재의 상황에

서도 소득분배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한미 FTA를 거론하고, FTA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미 FTA로 근로자의 절대임금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양극화의 경향은 FTA와는 별도로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여기서 단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득분배는 한미 FTA에 따라 개선되기도 어렵겠지만, 반대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개선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 5. 산업 · 기업간 양극화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 기업간 양면적인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전반적인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체수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규모가 큰 기업체일수록 사업체수 및 고용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표3>에서와 같이 1990년대 초 이래 중소 광공업체의 사업체수,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 및 생산성이 가장 열악한 종사자수 5~19인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사업체수,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500인 이상 기업체는 1975~1979의 2.12%에서 2000~2004년에는 0.31%로 감소한 반면, 5~19인의 기업체는 61.19%에서 75.21%로 증가하였다. 5~19인의 영세기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전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고용비중을 보면 500인 이상기업은 44.33%에서 19.06%로 감소한 반면, 5~19인 기업은 8.26%에서 26.36%로 약 3배 증가하였다. 5~299인까지의 중 · 소기업체의 고용비중은 증가한 반면, 특히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급감하였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500인 이상기업은 56.27%에서 41.36%로 감소한 반면, 5~19인 기업은 4.12%에서 12.16%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즉 중 · 소기업일수록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표4>에서와 같이 종사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2000~2004년간의 평균치를 볼 때, 종사자수 5~19인의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21.26%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1990~1994년간의 32.25%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것이다. 생산성의 격차 확대는 종사자수 20~49인의 소기업, 종사자수 50~229인의 중기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종사자수 300~499인의 중견기업의 생산성도 500

〈표 3〉 광공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 추이

① 사업체수 비중

(단위 : %)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75~79	100.00	61.19	18.61	16.39	1.70	2.12
1980~84	100.00	61.01	19.81	16.31	1.22	1.65
1985~89	100.00	57.71	24.36	15.68	1.00	1.25
1990~94	100.00	65.56	22.32	10.78	0.60	0.74
1995~99	100.00	72.59	18.21	8.33	0.41	0.47
2000~04	100.00	75.21	16.79	7.35	0.34	0.31

② 고용비중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75~79	100.00	8.26	8.72	28.92	9.77	44.33
1980~84	100.00	9.97	10.80	31.77	7.99	39.48
1985~89	100.00	10.97	14.61	32.16	7.28	34.98
1990~94	100.00	17.39	18.48	29.89	6.08	28.16
1995~99	100.00	22.40	18.81	28.95	5.34	24.49
2000~04	100.00	26.36	20.19	29.34	5.05	19.06

③ 부가가치 비중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75~79	100.00	4.12	5.19	23.39	11.02	56.27
1980~84	100.00	4.47	6.05	25.39	8.99	55.11
1985~89	100.00	5.36	8.66	26.76	8.40	50.83
1990~94	100.00	8.93	11.60	27.22	7.48	44.77
1995~99	100.00	10.46	11.06	26.04	7.49	44.95
2000~04	100.00	12.16	11.97	27.34	7.17	41.36

주 : 각연도별 비중의 단순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 년도

인 이상 대기업의 65.46%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체수, 고용비중, 부가가치비중을 보았을 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줄어든 반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표 4〉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비교(종사자수 500인 이상 대기업 100.0 기준)

(단위 : %)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75~79	78.79	39.51	46.74	63.73	88.70	100.00
1980~84	71.62	32.22	40.23	57.27	80.66	100.00
1985~89	68.85	33.49	40.68	57.39	79.41	100.00
1990~94	62.80	32.25	39.39	57.15	77.34	100.00
1995~99	54.47	25.49	32.11	48.95	76.47	100.00
2000~04	46.08	21.26	27.32	42.95	65.46	100.00

주 : 각연도별 비율의 단순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 년도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지식정보화의 전개이다. 지식정보화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벤처기업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식정보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자본집약적 혁신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시대 참여정부는 연관기업·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자정보관련 대기업의 기술혁신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설비투자,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것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국내 부품

소재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저생산성을 감안할 때, 개방의 충격은 퇴출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의해 국내 기업이 구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따른 급속한 개방 확대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한미FTA협정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제조업 부문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산업·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6.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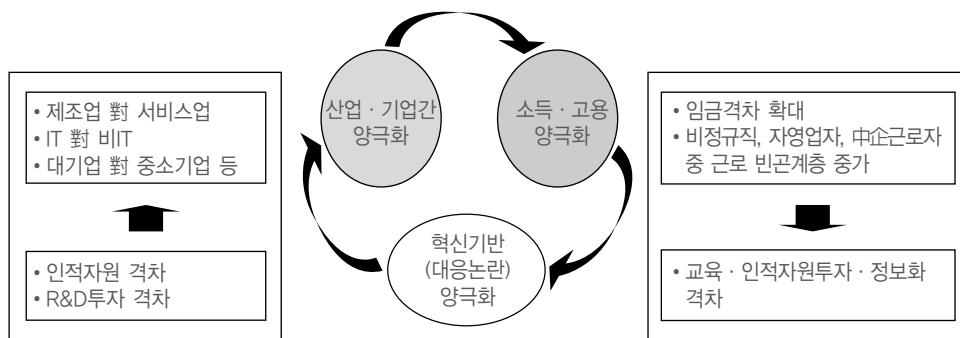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환경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 능력 격차로 인해 산업·기업간 양극화 및 고

용·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중국의 부상, 지식기반화 등 양극화의 외적 요인이 앞으로 더욱 심화됨에 따라, 유형화된 부문간 양극화(수출-내수, 경공업-중화학공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등)에서 특정 부문, 산업, 업종을 막론하고 순수한 개별 주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전방위적인 양극화가 전개될 수도 있다. 국내 선도대기업,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계속 약진하는 반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제조업체, 그리고 전통적 서비스업 및 건설업 내 다수의 영세업체들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전방위적인 양극화 속에 소득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기대 이상의 고성장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근로빈곤계층 및 경제성장에 항상 불만을 점차 더 증대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격차 및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투자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어, 노동의 세대내, 세대

간 이동성이 제약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양극화는 경제구조 고도화의 불가피한 과정인 측면도 있으나, 사회통합기반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성도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찬반의 논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를 중심으로 고용, 소득분배, 산업·기업간 양극화 등 사회갈등에 한미 FTA가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는 전반적인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한국 기업들의 시장을 넓히고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거나 보다 넓은 선택의 여지를 갖는다. 평균 관세율이 7.2%인 우리의 시장을 평균 관세율이 1.5%인 미국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1% 경제성장



[그림 1] 양극화의 성격과 구조

를 증가에 8만 명 내외의 고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한미 FTA를 통해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과이므로, 한미 FTA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FTA를 통해 성장률이 제고되면 절대수준에서의 비정규직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에 관련해서는 한미 FTA로 자동차, 전자전기 업종의 대기업은 수혜를 얻는 반면, 중소기업, 그리고 농·축업에서는 타격이 예상되므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분배의 양극화의 원인을 FTA로 귀결시킬 수 없으므로, 소득분배의 양극화문제는 사회정책의 보완할 분야이다.

산업·기업간 양극화는 세계화로 촉진되었고,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자본집약적인 첨단기술 중심의 대기업은 수혜를 입는 반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더 심한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고용, 소득분배, 산업·기업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우리가 FTA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대외적으로는 더 심한 경쟁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며, 대내적으로는 사회 갈등적 요소를 소화해내는 일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무역협회무역연구소, 『한·미 FTA와 한국경제』,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방송위원회·금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노동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특위 자료, 2007.
- 박경·신동호,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 효과와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6.
- 산업연구원, 『한·미 FTA의 산업영향 평가 및 선진화 전략』, 2007.
- 신동연,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 전병유·김복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차남호·이상훈, 『한미FTA와 노동-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 국민보고서, 2006.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7.
- 허재준,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은 얼마나 적절한가?』,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